

법인세 인상이나 유지냐...여야 힘겨루기

여 “해외 투자 위축” vs 야 “과실 나눠야 성장”

추경 편성·조선업 구조조정 등 현안 집중 질의

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

여야는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 등 경제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여야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최근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자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차단을 내놨다. 정부도 불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경제관료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다”고 정부

를 질책했다. 또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6년치를 건너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국민의정 부·참여정부·이명박(MB)정부 등 역대 정부 또한 ‘넓은 세율, 낮은 세율’이 조세경쟁력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 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 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걸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둬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기업의 엄청난 사내 유보금은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처를 한 다음에 할 일”이라

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회복과 경제개혁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 등에 대해 당위성과 추후 계획에 대해 따져물었다. 아울러 여야와 정부는 청년실업, 주거비 폭등 등을 포함한 청년실업과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정책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비대위 인선 놓고 ‘삐걱’

“안 색깔 빼자”...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분리” 논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당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당내에서 소외받아온 일부 호남의원들이 ‘안철수 색깔 빼기’를 주장하고 나서다가 하면 안 전 대표의 조력자를 자임한 박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분리론’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잠복상태에 있던 안 전 대표 측과 호남 출신 그룹간 긴장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우선, 비대위 인선을 놓고 이 같은 역할관계가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위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위 인선과 관련, “비교적 당을 잘 아는 원내의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출 범시키고 2차로 외부인사를 영입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구색 맞추기 인선은 제외하고 오직 당의 기초를 쌓는,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비대위, 일하는 비대위를 기준으로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호남 출신 의원은 “안철수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열린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당의 뿌리인 호남 출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그동안 안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발탁되는 쪽에 당직 등 인선의 무게가 실렸던 것 아니냐”며 “그동안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호남 배제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 장, 예결위 간사, 상임위원장 다 호남 출신”이라며 “무슨 호남향우회, 친목회도 아니고...우리가 현 정부의 영남편중을 지적하면서 비대위 전원을 호남 출신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나”고 반문했다.

박지원 의원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겸임을 놓고도 당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일 최고위-중진 연설회에서 전북 출신의 정동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분리론을 거론한 것을 계기가 됐고 일부 호남 의원들이 정 의원 주장에 가세하면서 나타난 기류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가 당장 큰 힘을 얻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박지원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 안팎의 일반적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원 세비 절반 줄이자”

노회찬 정의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세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 및 국회 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아울러 개헌 논의와 맞물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하는 국회 만듭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비교섭 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벌 조장은 범죄행위...공천 배제”

새누리 비대위, 당헌·당규 명문화 추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 선거에서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이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범죄자들에게 대한 문제가 선거 때마다

달라져 문제가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보게 되면 파벌지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에 연루된 자로 막연히 규정돼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나 뇌물수수나, 당에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자에 대한 범죄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100%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 다음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때부터는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국민공천배심위원단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배심위원이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합성 심사에서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위원단의 결정은 수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배심위원단 구성 시기도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대통령 “올 여름 휴가는 국내로”

국무회의 주제 “추경 시급”... 14일부터 5일간 몽골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잘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실업대책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노력은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의 활력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

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내수를 살릴 좋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있는데 올해 여름휴가기간 많은 국민이 이 지역들을 방문하면 어려움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거제의 해금강, 울산의 심리대숲을 비롯해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휴양지를 적극 발굴해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4박 5일간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를 방문한다.

아셈 정상회의는 1996년 ASEM 출범 이래 2년마다 개최돼 왔다. 우리 대통령은 제9차 회의를 제외하고 계속 참석해 왔다. 이번 아셈 정상회의(15~16일)는 의장국인 몽골 주최로 아시아·유럽 51개국 정상과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